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 그 사회경제적 기반과 성격 1)

송주명

한신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본 논문은 1990년에 본격적으로 대두한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물질적 ·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전후 미국과 일본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상대화하면서, 아시아를 향후 일본의 핵심적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하는 외교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이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① 경제대국화론의 연장으로서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 내셔널리즘’이며, ② 현실적 사조로서 ‘견미입아’론과 ‘이미입아’론을 들 수 있으나, 이 중에서 특히 미 · 일관계를 폄하하고 아시아를 중시하는 ‘이미입아’론이 보다 완전한 형태이고, ③ 중국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두 개의 상이하고 논리적으로 대립적인 아시아인식 - 대아시아와 중아시아 - 을 보이며, ④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비용해성, 차별성을 전제로 아시아를 일본산업의 일방적 배후지로 개척하려는 신중상주의적 안행발전관에 입각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우선 ①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의 조건 속에서 ‘경제대국’적 대응방향 ② 미국정권과의 오접 및 갈등증폭 요인의 강화 ③ 아시아 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선택지 축소와 일본위상의 성장 등 세가지 국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면서 대두하였다.

넷째,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그 사회경제적 조건 - 산업적 지지와 구조의 영향력 - 을 갖고 있다. 먼저 산업적 지지면에서 ① 80년대와 90년대 일본산업의 해외투자와 융자를 통해 추진된 실질적 아시아지역통합은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일반적 경향을 야기했으며, ② 일본산업 전반을 위기적 상황으로 몰아간 아시아경제위기 속에서 철강, 자동차, 화학, 기계산업 등, 피해산업을 선두로 일본의 주력산업 전반이 글로벌 경제의 폐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명시적인 경제통합제도의 요구 속에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정책수준으로까지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까지 형성되어 온 일본과 아시아간의 산업간 수직네트워크라는 구조는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신중상주의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 주제어: 일본, 새로운 아시아주의, 아시아주의, 신중상주의, 경제민족주의, 지역통합, 지역주의

1* 이 논문은 1999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KRF99-003-C00093).

I. 머리말

최근까지 일본의 코이즈미(小泉純一郎) 정권은 역대정권들과는 달리 이른바 ‘친미 내셔널리즘’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코이즈미 자신의 ‘보수개혁’(신보수주의)적 지향과 미국 부시 행정권의 현실주의적 외교기조가 기묘하게 합치되는 상황에서, 아시아보다는 미국의 그늘 아래서 보수 우파적인 내셔널리즘이 보다 중요한 경향으로 대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은 이 ‘친미 내셔널리즘’의 외교사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약간 과도하게 해석하자면 전전의 ‘탈아론(脫亞論)’적 저류가 재생되는 듯한 인상마저 보여 주고 있다(이면우·송주명, 2001: 23-24).

그러나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대응과 그 이후의 사건추이는 일본이 온전한 의미의 ‘아시아 국가’ - 지리적 의미가 아닌 정치적 의미로서 - 는 못된다 할지라도, ‘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연관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아시아 국가’들에 포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아시아는 아니나 아시아를 떠날 수 없는 모순적 존재가 바로 일본인 것이다. 이것은 일본외교의 또 다른 ‘기축’으로서 아시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사실 1980년대부터 코이즈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일본외교사, 특히 경제외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아시아의 부활’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미 전략적 관계의 상대화를 포함하는 아시아중시, 혹은 아시아 통합의 경향이 하나의 선명한 외교노선으로 대두했다. 이 새로운 경제외교노선은 ‘자유무역협정’정책이나 ‘엔의 국제화’정책 등을 통해 현실화되었으나, 분명한 것은 이 노선이 현재 세계경제질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근본적 문제를 인식한 위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패권질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때 일본이 추구하던 아시아 외교와는 달리, 미국패권질서의 장기적 해체과정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하나로서 새로운 아시아 중시노선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상대화시키면서, 중기적으로 일본과 아시아국가들의 결합(경제적 통합)을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에 예비코자 하는 최근 일본의 경제외교사조를 ‘새로운 아시아주의’라 칭한다(송주명, 2001).

한편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외교노선은 1990년대 초반 혐미적(嫌米的) ‘아시아주의’ 정치카드와 달리, 일정한 국제적 전제와 경제적 기초를 갖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지역주의적 본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혜성 여부 등 그 결과적 특질과 무관하게, 이 노선 나름의 논리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단히 재생될 수 있는 일종의 물질적 기초(사회경제적 기초)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최근 코이즈미 정권의 ‘친미 내셔널리즘’ 혹은 ‘신탈아론’적 대외정책경향의 대두

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외교사조의 하나로서 '새로운 아시아주의'에 대한 현재적 검토가치는 충분하다. 가령 현재 진행중인 세계적 경제침체의 구체적 진행패턴이나 '테러국면'과 결부된 미국패권의 강도의 변화여부와 관련하여, 특정상황에서는 내셔널리즘 경향을 보다 강화한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거세계 대두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1980년대에 그 단초가 시작되어, 199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 '새로운 아시아주의' 외교노선의 기본성격과 그것의 물질적 기초(사회경제적 기초)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전 일반론적인 아시아주의와 비교의 맥락에서 '새로운 아시아주의'를 간단히 정의한 후, 여러 외교사조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그것의 현실적인 양태들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주의' 외교노선의 논리적 구조와 성격을 우선 밝힐 것이다. 나아가 이 노선이 재생산되는 물질적 기반의 문제를 국제적 구조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개념정의

흔히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하나의 일관된 논리체계를 갖는 사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전상의 정의만으로 볼 때에도 그 정의방법은 지극히 다양하다. 가령 '팽창주의 혹은 침략주의를 본질로 하는 반동사상,' '광역권 사상(廣域圈思想)의 한 형태,' 논문이나 네루의 '아시아주의' 등 여러 방향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해, 이 '아시아주의'라는 말은 종래의 이데올로기적 범주와도 명확히 일치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이 말은 심적(心的) 무드에 기초한 사조로 이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말에 대한 정의 혹은 개념화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전제한 잠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竹内好, 2000: 2-11).

전전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내셔널리즘적 국가정책과 결합되면서 그 최종형태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근대화의 문제와 결부된 제국주의적 식민지 체제, 그 거울상으로서 '굴욕의 아시아'를 지역공동으로 극복한다는 일종의 운동 명분을 갖고 있었다(松本健一, 2000: 90-98). 이른 바 '근대의 초극'이 전전 아시아주의의 기본 문제설정이 되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존재한다(廣松渉, 1989). 이러한 동일한 명분 하에 전전 아시아주의 사조는 '아시아 연대론'에서 '아시아 맹주론' 혹은 '대동아공영권'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關靜雄, 1999: 6-7, 118-130; 榮澤幸二, 1995: 16-17).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다양한 형태의 지향들이 현실적인 힘을 갖고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기보다는, '아시아 맹주론'에 의해 흡수·통합되었으며 그 궁극적 정책형태가 '대동아공영권'론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木坂順一郎, 1992: 503-504). 전전의 아시아주의를 그 가장 '완성된' 형태인 '아시아맹주론'과 대체로 동일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아시아맹주론’은 일본 내셔널리즘의 지역적 확대판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지배관계를 구조화하려 했다는 본질을 갖고 있다. 이 경우 ‘근대의 초극’론은 일종의 정책론으로 변조되는데, 전전 제국주의체제 하에서 일본의 대외적 독립과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자신들의 자족적 제국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정책이데올로기가 된다(榮澤幸二: 23-25).

이렇듯 전전의 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근대화라는 특징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채색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에 이미 근대화의 과제를 달성했으며, 그 이후 아시아지역 또한 더 이상 ‘굴욕의 아시아’가 아닌 ‘발전과 번영’의 아시아로 변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전전의 ‘아시아주의’의 정의를 그대로 전후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松本健一: 159-190). 한편 전후의 ‘아시아주의,’ 즉 ‘새로운 아시아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전전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추상하는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 전전 ‘아시아주의’의 일반적 경향들을 상황적 요인을 추상하여 추출해 보건대, 그 주요한 요소들은 ① 구미와의 심각한 대립·투쟁상황을 배경으로, ② 일본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③ 아시아 국가들을 단일한 통합지역범주로 편입시켜 가는 외교지향으로 좁혀질 수 있다.

전후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이 일반적인 요소들을 공유하지만, 전전 ‘아시아주의’ 원형과는 사뭇 다른 역사적 조건 위에서 전개된다. 우선 국제적 경쟁의 형태면에서 식민지주의를 수반하는 구제국주의적 조건이 아니라, 일본 자신이 ‘경제대국’으로서 패권경쟁의 일부에 참여하는 신중상주의적 색조의 경쟁이 주요한 조건을 이룬다. 따라서 구미,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쟁은 식민지 획득경쟁의 양상이 아니라, 신중상주의적 지역통합경쟁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대두한다. 둘째 현재의 탈냉전적 국제구도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대상인 미국과 일본은 냉전적 동맹의 연장 위에 서있으며, 현재에도 이 동맹의 제도적 관성과 이념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작동되고 있다. 셋째 제2차대전 후 전개된 엄청난 속도의 글로벌리제이션은 미·일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화시켰으며, 이 또한 미·일간의 원심적 극화현상을 일정정도 제어하면서, 아시아만의 지역범주형성에 여러 가지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아시아의 내부상황 또한 전전과 같은 ‘굴욕의 아시아’가 아니며, 탈근대화의 경제발전에 기반한 신중상주의적 지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아시아는 더 이상 ‘저항’의 주체가 아니며, 일정한 제도적 특질과 자기능력에 기초한 ‘대항’의 주체로 성장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의 ‘핵심’에 위치하는 중국의 발전과 존재감이다. 중국은 더 이상 덩치 큰 ‘허수아비’가 아니며, 장래 미국보다 덜 하지 않는 일본의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若宮啓文, 1995: 60, 108-135).

따라서 전전 ‘아시아주의’로부터 추출된 일반적 특징은 전후의 ‘새로운 아시아

아시아주의'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현실화된다고 할 수 있다. ① 냉전이래 형성된 미국과 일본간의 정치경제적·전략적 동맹관계에 대한 상대화 ② 세계적 미국패권의 약화과정에서 경제대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지속하기 위한 신중상주의적 국가이익계산 ③ '성장한'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경제적 대항심리'와 지역주의경향의 동원 ④ (찬반, 친소여부와 무관하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배려 혹은 포석(Cronin, 1992: 115-118; Gilpin, 1987).

III. 외교사상의 조류와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현실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외교사조는 단일한 논리체계로 환원될 수 없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세계경제 현실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의 층위들이 제시되고, 이 층위상의 일정부분 혹은 경향들에 대해 '새로운 아시아주의'라는 호칭을 줄 수 있을 따름이다. '아시아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살펴 볼 4개의 기준, 즉 세계 속에서 일본의 위상설정, 미국 및 아시아와의 관계설정, 동북아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인식, 민족주의 및 국제주의와의 상관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기준들에 따르는 외교사조의 전반적인 배치와 각 기준들의 교차를 통해,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현실태와 그 속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1. 일본의 세계적 위상설정과 '새로운 아시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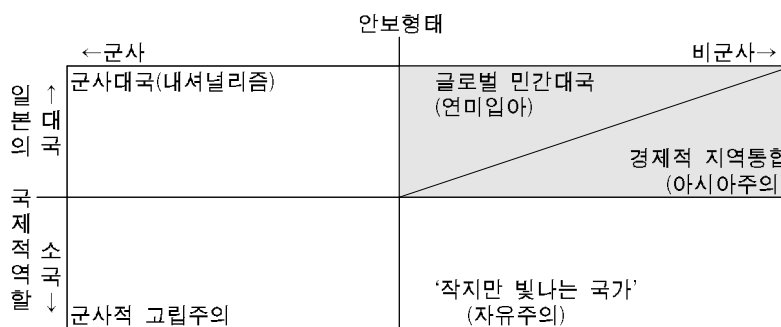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에 대한 논의는 일본의 세계적 위상설정과 관련된 종래의 논의 속에서 위치매김을 통해 시작할 수밖에 없다. 즉 90년대 후반 일본의 장래를 예측하면서, 사토 세이자부로(佐藤誠三郎)는 일본의 세계적 위상을 둘러싼 논쟁의 구도를 안보적 측면과 일본역할의 적극성여부를 중심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따르자면, 한 축은 군사주의와 비군사주의, 다른 한 축은 대일본주의와 소일본주의로 구성되며, 중축과 횡축의 교차에 따르는 입장들이 배치된다(佐藤誠三郎, 1997: 180-182).

가령,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군사주의와 대국주의가 겹치는 영역은 흔히 '보통국가화'로 지칭되는 입장으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코이즈미 준이치로, 모리 요시로 등 보수우파계열의 정치가들이 여기에 속하며, 정당으로서는 자민당의 보수우파계, 자유당, 보수당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군사적 대국추구의 경향은 한 마디로 '세계적 문민대국(global civilian power)'론으로 귀착

된다. 이 입장은 정치인으로서의 자민당 보수 분류계열의 코토다 마사하루, 미야자와 키이치, 카토 코이치 등과 ‘구개진당’계열인 카이후 토시키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칸 나오토 등 민주당 중도좌파, 사회적 여론기관으로서 아사히신문(대표적으로 후나바시 요이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현실적인 ‘군사주의적 소국주의’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일본내에서 이상주의적 자유주의 계열에 속하는 ‘작지만 빛나는 국가’론이다. 이 입장에는 원래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 등 ‘소일본주의’에서 유래하지만 타케무라 전 신당사키가케 당수, 사카이야 타이치 전경제기획청장관, 시나가와 마사지(品川正治) 전 경제동우회 부대표간사 등이 속한다(若宮啓文, 1995; 品川正治, 2000).

그러면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 타케우치 요시미의 지적처럼, 사실은 이 입장 어느 하나와도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시아주의’의 본성상 그것은 소국주의보다는 대국주의와 보다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竹內好, 9). 그런데 보수우파들의 군사적 대국주의는 정치적 내셔널리즘과 그로 인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계심, 나아가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립관으로 인해 아시아주의로 확대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본질적으로 ‘비군사대국’ 추구경향과 친화력을 갖고 있다. 이 ‘세계적 문민대국론’에는 아사히나 후나바시와 같은 일종의 정치적 이상주의 그룹도 존재하나, 사실은 경제주의적 위상설정이 보다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경제주의적 접근의 핵심은 다름 아닌 ‘경제 내셔널리즘’이며, 이것이 세계주의(globalism) - 혹은 그 핵심으로서 친미 - 나 지역주의(regionalism) 경향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지역적 경제통합을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본의 ‘경제 내셔널리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일본의 위상설정과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연원



2. 세계와 일본: 미국과 아시아의 사이

그런데 이 '비군사 대국주의,' '세계적 문민대국'론만으로는 완벽히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특질을 전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앞의 일반적 정의와 관련하여, 제반 외교사조들이 어떻게 형성·분화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우선 외교사조들이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관계설정을 둘러싸고 어떻게 성충화되는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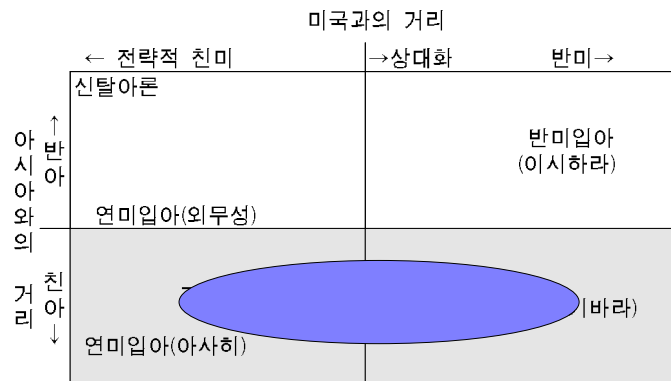
이를 위해 그림 2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종축은 미국과의 거리를 의미하며, 횡축은 아시아와의 거리를 의미한다. 우선 미·일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관점상 정치적 내셔널리즘, 보수주의, 현실주의적 입장을 갖는 경우, 논리적 자연귀결로서 혹은 아시아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힘의 정치'의 관점에서 아시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입장은 민족주의적 움직임, 공통 가치관의 부재, 지속적 발전가능성의 결여 등으로 아시아 정세가 비관적이라 판단하며, 일본이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의 강화라고 판단한다(岡崎久彦, 1999: 50-52). 이 입장은 외무성 현실주의파의 입장을 간접적이거나 대변하는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전타이대사와 보다 보수적 내셔널리스트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타쿠보 타다에(田久保忠衛) 등이 대표한다(田久保忠衛, 2001). 한편 이 사조는 정치적 내셔널리즘이라는 점에서 '군사대국적 보통국가론' 지향성이 강하며, 2001년까지 코이즈미 정권이 보여준 보수적·우경적 외교자세와 경향적으로 많은 지점에서 일치된다(이먼우·송주명, 2001). 이 입장은 미국과의 '힘의 연합'에 기초한 아시아에 대한 일종의 '돌파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타이론'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한편 여전히 외교사조의 표준은 미국과 아시아를 동시에 배려하는 견해이다. 이 사조는 이상주의적 경향이든 경제 내셔널리즘(실리주의)의 경향이든 앞의 '세계적 문민국가'론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종래 외무성, 경제기획청, 통산성 일부 등 관청의 주류견해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입장은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아시아 중시의 자세를 강화해 가는 특징을 갖는다. 이 입장은 아시아지역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미·일간의 정치경제적 전략적 동맹을 위치지운다. 이 주류적 외교사조는 '연미입아(連米入亞)'라고 명명될 수 있다.¹⁾ 한편 '연미입아'의 사조는 아시아 중시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아시아의 '등거리'외교사조이며, 지역통합범위 또한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 입장에는 자유주의적 지향이 강한 '아사히 그룹'(『朝日新聞』 朝刊, 1993.8.25; 船橋洋一, 1998: 43)과 동경대학의 다나카 아키히코 교수(田中明彦,

1) 이를 일본에서는 통상 '반미입아'(伴米入亞)라 부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나중에 볼 '반미입아'(反米入亞)론과의 발음상의 혼동을 막기 위해 '연미입아'라 칭한다.

2000)가 포함되며, 관료그룹으로서는 외무성의 주류파(池田維, 1994)가 여기에 속한다.

그림 2.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좌표: 미국과 아시아의 사이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면모는 미국과의 관계를 상대화시키면서, 그에 비례하여 아시아에 보다 많은 외교중점을 두는 것에서 발견되기 시작한다. 우선 ‘세계적 문민국가’론이라는 ‘주류적’ 인식에 뿌리를 두면서도, 통산성과 같은 관료조직은 미국에 대해 보다 강한 경제적 민족주의의 관점, 혹은 신중상주의적 관점을 취해 왔으며, 미국의 경제적 마찰압력에 대해 ‘아시아’를 동원해 견제하려는 자세를 취해왔다. 통산성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일간의 안정된 공존과 협력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아시아만의 비공식적·공식적 하위협력 제도(산업정책대화나 아세안-일본경제부서 회의 등)를 통해 미국의 자유화압력을 막아내려고 했다(송주명, 1998: 47-55, 65-72). 이들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범주의 유의미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압력에 대한 제어장치로서 ‘아시아’만의 하위협력제도를 중층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시아주의’로의 일종의 과도적 단계를 보여주었다. 이 외교노선은 ‘견미입아(牽米入亞)’ 노선으로 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개념화의 과정에서 지적한 바대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서(反米) 아시아로 들어가자’는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도지사의 ‘반미입아(反米入亞)’론이다. 그러나 이시하라는 경제적 지역주의를 추구하기도 하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보수우파 내셔널리스트이다. 그는 전전의 ‘대동아공영권론’의 문제점, 즉 정치적 내셔널리즘과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일체화되면서 나타나는 아시아에 대한 지배추구의 경향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시대적 조건과 결맞지 않게 그는 반미와 ‘굴욕의 아시아,’ 즉 지배대상으로서의 아시아상을 결합시키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지역주의로서

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이며, 사실상 '아시아주의'가 아니라 반미·반아시아의 '순진한' 내셔널리즘일 뿐이다(『文藝春秋』, 2000.8: 117-118; 『朝日新聞』 朝刊, 2000.4.29; 『朝日新聞』 朝刊, 2000.5.21; 石原愼太郎, 1998: 122-124). 이와 더불어 다른 하나의 경향은 구사회당 좌파의 반미·아시아친선의 경향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이미 쇠약한 경향일 뿐만 아니라, 그 지향의 소일본주의적 성격으로 '아시아주의'라 부르기에는 걸맞지 않다.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가장 현실적인 존재양태는 기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존 관계를 전술적인 관계나 단순한 경쟁관계로 폄하하면서 아시아 중심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사조이다. 이들은 미·일관계의 전술적 유지필요성을 인정하나 경제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을 서슴치 않으며, '아시아적 가치'관을 동원해 미국적 세계질서를 비판한다. 미국은 'enemy'와 'friend'의 양면을 갖는 'rival'로서 위치 지워지며, 그 패권의 필연적 쇠퇴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이 이를 점차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中西輝政, 2000a: 63-65; 中西輝政, 2000b: 99-100; 中西輝政, 1999: 99, 105-108). 이들은 전세계적 차원이나 아시아·태평양 차원의 협력과정의 중요성을 폄하하며, 대신에 아시아만의 협력을 보다 중시한다. 결국 '아시아'는 예상되는 미국질서의 파국에 의식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모색인 것이다(『國際問題』, 2001.1: 7-10). 이러한 입장은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아시아지역이 '대미경제 대항심리'와 '지역주의' 경향을 강화한 것을 배경으로 본격화되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이탈정도와 아시아 질서의 구체화면에서 이 외교사조는 '이미입아'(離米入亞)론으로 칭할 수 있다. 아시아국가들의 달러페그(dollar-peg)제 하 급격한 통화불안정을 계기로 '엔의 국제화정책'이 AMF 구상, 신미야자와 구상, 마닐라 프레임워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전개와 더불어 추진된 것, 나아가 지역무역의 침체 경향 속에서 일본과 아시아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형성이 모색되고 있는 것은 이 사조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입장은 비교적 최근 관료조직을 중심으로 외무성 일부와 구 대장성 국제통화담당부문(국제금융국과 재무관실), 그리고 최근 통산성(경제산업성)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논객으로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榊原英資) 전 대장성 재무관, 오구라 카즈오(小倉和夫) 전 외무성 경제심의관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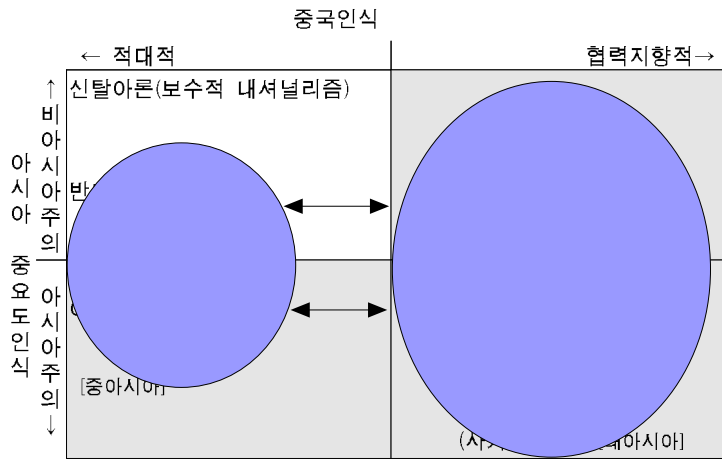
IV. ‘새로운 아시아주의’와 지역질서 형성의 문제

1. 동북아 정치와 일본: 중국의 문제

앞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세계적 문민국가’론의 경제 민족주의에서 연원하지만, 이른바 ‘견미입아’와 ‘이미입아’의 사조가 그 현실적 존재양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조는 미·일관계의 상대화 정도만큼 ‘아시아’중심의 질서구상 또한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지역질서’의 구상의 핵심은 동아시아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지역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는 커다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중국문제는 지역의 범위확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지역내부의 협력 혹은 관계패턴을 크게 규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사실 중국과 관련된 논쟁의 역사는 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중국위협’논쟁이 그것이다. 일찍이 중국의 패권주의적 대외군사관행이 일본에서 문제가 되어왔으나, 실질적인 논쟁은 1993년 세계은행의 『동아시아기적』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즉 21세기 중국의 경제대국화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중국이 통제되지 않는 지역패권 추구국가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간 중국정책 논쟁 구도를 일본 또한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일본의 정치적 내셔널리스트들은 중국을 커다란 위협으로 보며, 중국의 ‘위험한 성장’을 막기 위해 견제(혹은 봉쇄)를 부르짖거나 미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체제정비 - ‘보통국가’화와 국가적 정체성의 강화 - 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들의 희망적 현실인식은 ‘중국개발의 경착륙,’ 즉 분열이었다. 이에 비해 ‘세계적 문민국가’ 지향세력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중국의 개혁과정은 용이치 못할 것이며 개혁의 성사를 위해서는 일본 등 서방국가와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중국이 국제정치경제질서에 편입되어야만, 공존가능하고 안정적인 존재로 순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내부의 강화된 내셔널리즘이나 대외적인 중국견제·봉쇄론에 반대하며, 유일한 대안이 중국의 ‘포용’(engagement)임을 주장한다. 이 점에서 경제 내셔널리즘의 확대판으로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대체적으로 친중, 혹은 대중 협력지향적 지향성이 강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림 3. '새로운 아시아주의'와 중국변수



대체로 연미입아론자들이나 자민당의 보수분류계열, 통산성의 경우 중국을 '성장하는 거대시장(Emerging Market)'으로 인식한다. 애초에 이들의 지역지향은 아시아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않으며, 적어도 아시아·태평양이었기에 중국이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도리어 일본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 및 무역시장이었다. 한편 '이미입아'론의 경우도 커다란 대차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령 지역통화 및 금융협력의 경우, 중국이 배제되었을 때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자유무역협정의 경우도 당면의 과제는 아니되 단계적으로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견미입아'론과 '이미입아'론으로 대표되는 경향들 속에서 중국인식의 문제는 단일한 경향만으로 수렴되지는 않는다. 가령 '반미입아'론의 이시하라가 냉전주의적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아시아 경제위기 시 중국 개발의 위력(위엔화 평가절하)을 상기한다면 '중국문제'는 논자에 따라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국제무역의 과정에서 중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조바심과 더불어, 일본이 대국주의적 중화질서에 편입되어 갈 가능성마저도 제기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아시아주의' 내부에서도 중국과 관련되는 한 정치적 내셔널리즘의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대중 냉전적 사고의 조류가 '새로운 아시아주의'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시아주의' 계열의 외교사조 내부에서도 중국변수에 대한 태도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이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스스로의 지역구상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2. 아시아 경제와 일본: ‘융해’인가, ‘독립’인가?

새로운 지역질서의 현실화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의로서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중의 하나는 그것이 국제주의적인지 아니면, 일국주의 혹은 신중상주의(경제 민족주의)적인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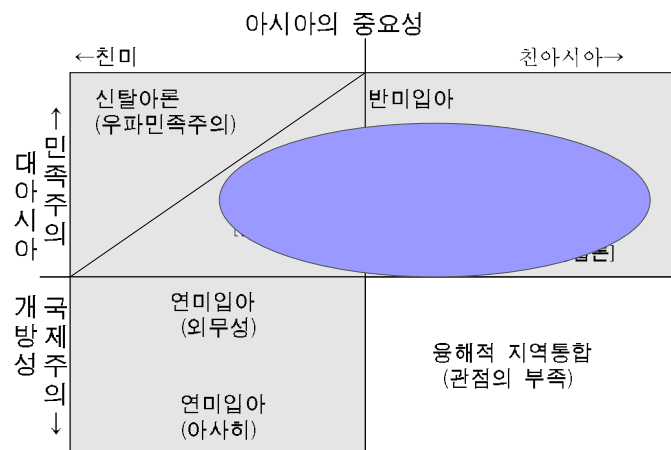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유럽연합(EU) 형성과정에서 유럽지역과 독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원래 독일은 유럽지역에서 전쟁의 위협으로 지목되어왔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경험은 다름 아닌 독일의 실패의 역사였다. 1990년대 전반 당시 독일의 겐셔외상은 이 실패의 역사를 “독일은 유럽을 독일화하려고 안간힘을 썼기에 실패했다”는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바 있다. 이렇듯 유럽의 통합은 독일을 유럽내에 안치시켜 전쟁을 추방하려는 정치적 목표가 있었다. 2차대전 이후 이러한 전유럽적 목표는 독일의 목표로 수용되어, 이른바 ‘독일의 유럽화’를 추구하게 된다(重村智計, 1999: 77-80).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독불동맹이 기초가 되어 EEC(유럽경제공동체), EC(유럽경제공동체), EU(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집단적 경제협력체제의 길을 찾았다. 이는 독일의 철저한 과거사 청산과 정치경제적 국제주의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 이리하여 유럽은 지역주의가 지역질서의 기본이 되고, ‘유럽 속에 융해된 독일’로 나아갈 수 있었다(白石隆, 2000: 60-61).

일본은 어떠한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으나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본 논문의 주제인 ‘새로운 아시아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화인 엔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시아주의라는 지역주의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해,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지역의 정치경제질서를 창출함으로써 그 위에서 일국주의적 독립이나 경제이익을 획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白石隆: 61).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독립주의’는 전후 오랜 기간동안을 통해 형성된 자기완결적인 ‘안행발전론’(雁行發展論)의 연장선상에서 비롯한다. 산업정책의 조절기능을 통해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완결성(조직된 시장)을 유지하고, 제한된 한도(비교열위산업)의 해외이전·해외투자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수출을 모두 균형있게 유지해 가려는 전략이 그것이다(沖本・クラスナ, 1987: 215-248).

최근 일본내부의 산업구조개혁이나 규제완화논쟁 또한 적절한 출구를 찾고 있지 못하다. 요컨대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시장원리도입의 주장은 주류 논의로부터 퇴조하고 있으며, 종래 일본의 조직된 시장과 기업모델을 부분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는 ‘일본모델’ 수정론이 재부상하고 있다(『文藝春秋』, 1999.10: 184-194; 田中平藏, 1999: 109-118). 그러나 일본이 이렇듯 돌출적이고 독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는 방향에서 아시아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면, 아시아지역의 상호의존구조는 지극히 기형화될 수밖에 없다. 즉 아시아는 비교우위의 침식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난관에 봉착하

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은 현상유지 혹은 확대되어 가는 구조적 비대칭성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일본경제에 일정한 득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아시아경제의 침체가 일본으로 역류할 수도 있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된다.

그림 4.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내포: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V.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국제적 조건

그러면 왜 90년대에 들어서 '견미입아,' 혹은 '이미입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대두했는가? 우선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대두하게 된 국제적인 맥락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1. 일본의 경제대국 위상

먼저 한가지 점검해 두어야 할 점은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세계경제체제에서 일본의 경제대국으로의 지위상승을 거시적인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1980년대에 세계 GDP의 10%를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가령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경제의 비중이 31.7%였던 데 비해, 일본은 6.4% 정도만을 차지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까지 미국비중의 지속적인 감퇴에도 불구하고, 일본비중은 약 15% 대까지 상승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지위변화는 일본 경제활동의 국제체제에 대한 영향력 변화를 수

만하는 것이며, 그에 따르는 국제적 행동패턴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다. 가령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태도와 역할 면에서 경제적 소국은 수동적(reactive)이며 질서의 일반적 수혜자(takers)인 반면, 경제대국의 단계에 접어들면 태도면에서 적극성(proactivity)을 담보하게 되고 역할면에서는 질서의 ‘창조자/제공자’(makers)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Krasner, 1978: 52). 전전 ‘아시아주의’가 제국주의 일본과 타 제국주의체제 간의 식민지 분할경쟁의 산물이었다면, 전후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세계적으로 격화된 경쟁에 치한 경제대국 일본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역 신질서 형성의 의사표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표 1〉 세계 GDP에서 주요 3국의 비중 변화

(단위: 100만달러)

	1970	1980	1985	1987	1988	1989
세계	3,180,900	11,622,400	12,661,300	17,292,220	19,233,600	20,204,000
일본	230,736 (6.4)	1,059,262 (9.1)	1,325,996 (10.5)	2,374,979 (13.7)	2,850,008 (14.8)	2,834,232 (14.0)
서독	184,508 (5.8)	813,498 (7.0)	621,770 (4.9)	1,114,639 (6.4)	1,172,533 (6.1)	1,176,632 (5.8)
미국	1,009,220 (31.7)	2,688,470 (23.1)	3,976,470 (31.3)	4,452,878 (25.7)	4,809,081 (25.0)	5,132,001 (25.4)

* 주: ()는 비중.

자료: United Nations,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Analysis of Main Aggregates, 1988-1989*(New York: United Nations, 1991), pp. 5-8의 Table 1을 재구성.

그러나 일본은 왜 80년대 경제대국화와 더불어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모색을 할 수 없었을까? 경제대국의 반열에 접어든 후 왜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정책환경의 관성(내향적 산업정책의 관성, 아시아 지역주도에 대한 내외의 반발 등)과 관련된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패권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국가 간 마찰과 이것이 야기하는 사회심리적 대항의식, 나아가서는 경기침체와 종래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등 순차적 사건전개의 시간소요를 들 수 있다. 가령 80년대의 경우, 패권구조의 변동에 따르는 심각한 경제적 마찰은 존재하였으나 성장지속으로 인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 이것이 미국에 대한 사회심리적 대항의식을 이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격적인 대미대항의식은 90년대 들어 두 번의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발현되게 된다. 첫째, 90년대초반의 초엔고 불황 속에서 전개된 미·일 마찰이다. 둘째 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경제위기와 그 효과의 일본역류를 들 수 있다.

2. 외압의 구조: 패권의 성격

한편 80년대와 90년대 미·일 관계를 연계하는 정치세력간 네트워크의 차이와 그로 인한 외압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 또한 1990년대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발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²⁾ 가령 1980년대의 경우, 경제마찰의 격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레이건과 나카소네 간의 반공 신보수주의 동맹이 강고하게 존재했다. 이러한 동맹구조는 경제관계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다소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해 1990년대의 시기는 양국 모두에 '오접(誤接: mismatch)' 요인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93년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등장했고, 일본은 90년대 전반에 걸치는 자민당의 복조(復調)에도 불구하고 연립정권의 시기가 지속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안보문제면에서 합리적인 동아시아정책을 취하게 되었지만, 이 문제를 양국간에 조정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비용이 지불되었으며, 클린턴정권 초기 일본시장 개방정책(수치목표설정 등)이 일본 정책당국 및 여론그룹의 예상외의 반발을 야기했다. 나아가 아시아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본의 적극적 대응부족이 미·일간 불신과 대립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비판은 일본국내의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중시정책, 즉 '일본우회(Japan Passing)'론, 미·일간 네트워크의 결여 등의 문제가 일본 국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일본은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새로운 생존방식으로서 지역주의적 접근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田久保忠衛, 56-91).

3. 좌절의 아시아: '캐취업 위기의 초극'으로서 '새로운 아시아주의'?

한편 미국에 대한 일본측의 '대항의식'이 강화되더라도, 아시아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경제의 태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엔의 국제화나 자유무역협정 정책과 같은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일본의 신중상주의적 대외경제관행 등으로 발생했던 대일 불신감은 아시아 경제위기로 파생된 각국의 통화부족, 수출부진, 경기침체, 금융체계의 혼란 등 난관 속에서 일거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시아 위기의 심화 속에서 이 위기에 대해 기동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책을 제시해 줄만한 국가는 역시 경제대국인 일본뿐이었다. 일부 국가들의 잠재적 대미대결자세, 아시아국가간의 연대의식이 '성장과 변영의 아시아'가 '좌절의 아시아'로 일시적으로 퇴보함으로써 발생했듯이, 아시아로부터 제기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근

2) 미·일간의 정치세력 네트워크의 문제를 도입하여, 친미와 반미의 정서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저술은 田久保忠衛(2001: 16-55)을 참조.

대의 초극'이 아닌 '캐취업 위기의 초극'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민족주의자들은 일본과 아시아의 친근성 혹은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적 결합의 필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中央公論』, 1999: 102-103). 어쨌든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자'들은 아시아와 일본의 공감 위에서 '동아시아 모델,' 즉 '캐취업 체제'의 위기를 낳은 국제금융·통화질서와 미국주도의 무역자유화체제를 비판하면서, 아시아지역의 통합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왔던 것이다.

VI.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 일본기업의 국제네트워크와 아시아위기

본 장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해 간략히 분석할 것이다. 이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한 분석은 1980년대 말 이후 1990년대까지 일본기업들의 아시아 국제분업양상의 특징을 통해 일본기업의 아시아중시경향의 양적 조건을 확인하고, 아시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어떠한 요구들이 어떠한 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아시아주의' 등장 의 물질적 조건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최근에 나타나는 일본기업의 새로운 분업경향이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구체적 정책사례인 '엔의 국제화'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정책에 대해 주는 정책적 함의를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1. 80년대 이후 아시아 국제분업: 양적 측면

우선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제조업 대아시아 해외투자 상황을 통해 일본의 국제분업 속에서 아시아가 점하는 비중을 보도록 하자. 우선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전세계 누적투자액이 572억 달러였는데 112억 달러가 아시아로 유입되었고, 이중 73억 달러가 ASEAN 국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중은 아시아 전체로는 약 20%, 그리고 ASEAN이 경우 총투자액의 13%를 차지하는 것이다. 전체로보아 큰 비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 기간동안 대다수의 투자가 선진국을 향하고 있고 발진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거의 없었음을 상기할 때,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大藏省, 1986-1990)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 경제위기가 일어난 1997년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표 2>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일본기업 해외투자 상황을 누적액면에서 보면, 아시아지역은 전세계 해외투자에서 19%를 점하며, 제조업의 경우 32%라는 막대한 액에 이른다. 이는 80년대의 투자규모를 현격히 초월하는 액수이다. 이는 일본산업에 있어서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이 특히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본 대외경제정책 - 국제금융정책 및 통상정책 - 의 아시아 중점

이동의 기반이 되어 왔다.

특히 버블이 붕괴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제조업 해외투자를 보면, ASEAN 주요5개국 -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과 중국의 누적액은 아시아 전체투자의 51%와 32%에 이르러, 아시아지역중 ASEAN과 중국이 일본대외경제정책의 핵심적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아 아시아 지역투자의 주도산업들은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기, 화학, 철·비철, 자동차, 기계 등 현재 일본의 주력산업들이다. 일본국내의 주력산업들은 아시아와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전체 해외투자액의 약 1/3을 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ASEAN과 중국지역을 전략적 거점으로 통합해 왔다.

<표 2> 1990년대 일본의 해외투자현황(지역별)

(억엔, %)

지역	90-97	%	98-2000	%	90-2000	%	51-99누계 (100만달러)	%
북미	195,383	45	55,202	31	250,585	40	305,576	42
	60,482	42	31,848	42	92,330	42		
아시아	84,474	19	22,900	12	107,374	17	125,965	17
	46,332	32	13,672	18	60,004	27		
유럽	89,048	20	73,693	41	162,741	26	156,728	22
	25,716	18	24,741	33	50,457	23		
중남미	39,223	9	22,982	13	62,205	10	83,706	12
	6,246	4	3,718	5	9,964	5		
기타	31,791	7	5,472	3	37,263	6	51,757	7
	5,861	4	1,811	2	7,672	3		
합계	438,919	100	180,249	100	620,168	100	723,732	100
	144,637	100	75,790	100	220,427	100		

* 주: 1. 상단은 전산업 누계

2. 하단은 제조업 누계

3. 51-99년 누계는 전산업(달러 기준)

자료: 대장성 자료, 『ジェトロ投資白書(2001年版)』: <http://www.mof.go.jp/1c008.htm>;

<http://www.mof.go.jp/fdi/sankou01.xls>; <http://www.mof.go.jp/fdi/sankou02.xls>;

<http://www.mof.go.jp/fdi/sankou03.xls>의 재구성.

〈표 3〉 일본제조업의 아시아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억엔)

국·지역	93-97	%	98-2000	%	51-2000	%
ANIEs3	3,874	11	2,973	22	17,204	19
ASEAN5	17,289	51	7,430	54	54,445	60
중국	10,786	32	2,470	18	15,564	17
기타	1,702	5	734	5	2,943	3
합계	33,833	100	13,672	100	90,947	100

- * 주: 1. 투자액은 누계. %는 아시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기타는 베트남과 인도의 합산임
 3. ANIEs3=한국 + 홍콩 + 대만,
 4. ASEAN5=싱가폴 + 인도네시아 + 타이 + 말련 + 필리핀

자료: 대장성 자료, <http://www.mof.go.jp/1c008.htm>;
<http://www.mof.go.jp/fdi/sankou01.xls>; <http://www.mof.go.jp/fdi/sankou02.xls>;
<http://www.mof.go.jp/fdi/sankou03.xls>의 재구성.

〈표 4〉 아시아지역 일본 제조업의 업종별 진출상황(90년대)

(단위: 억엔)

업종	아시아전체					
	90-97	%	98-2000	%	90-2000	%
식품	1,696	4	583	4	2,279	4
섬유	3,540	7	690	5	4,230	7
목재,펄프	904	2	245	2	1,149	2
화학	7,619	16	1,957	14	9,576	16
철,비철	4,865	11	1,965	14	6,830	11
기계	3,970	9	965	7	4,935	8
전기	12,248	26	3,471	25	15,719	26
수송기	4,518	10	2,335	17	6,853	11
기타	6,973	15	1,460	11	8,433	14
제조업계	46,332	100	13,672	100	60,004	100

자료: 대장성 자료, <http://www.mof.go.jp/1c008.htm>;
<http://www.mof.go.jp/fdi/sankou01.xls>; <http://www.mof.go.jp/fdi/sankou02.xls>;
<http://www.mof.go.jp/fdi/sankou03.xls>의 재구성.

한편 일본산업의 대아시아 ‘국제분업’양상은 금융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금융산업의 경우, 초저금리가 지속되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진출하였다. 〈표 5〉는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년을 기준으로 한 일본은행들의 대아시아 용자잔고를 타국가 은행들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행들은 중국, 한국,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거액을 융자하고 있었으며, 이들 국가들

에 대한 용자규모 또한 구미제국들의 용자를 최소한 두배이상 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민간은행들은 공식집계만으로 951억달러, 즉 당시환율로서 약 12조엔 이상을 아시아지역에 용자하고 있었다.

〈표 5〉 97년 6월말 현재 일본은행들의 대아시아 용자잔고

(단위: 억달러)

국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합계
	용자액	비율					
중국	187	32.3	73	29	69	73	579
인도	38	20.4	33	20	18	14	188
인도네시아	232	39.4	56	46	43	48	587
한국	237	22.9	108	100	61	101	1,034
말레이시아	105	36.4	57	24	20	29	288
필리핀	21	14.9	20	28	11	17	141
대만	30	12.0	30	25	32	52	252
타이	377	54.4	76	40	28	51	694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민간은행의 용자액을 각국중앙은행을 통해 BIS가 집계한 것

일본의 산업과 금융기관은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 실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이 산업들은 일본 국내의 주력산업으로서 90년대 초 중반 통산성 및 외무성, 재계, 일부정치인들의 아시아중시 정책정향을 광범위하게 조건지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산업들의 대규모 아시아진출에 기반한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사조는 1997년 이전까지 아직 추상적인 경향성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엔의 국제화' 및 '자유무역협정' 정책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됨에 있어서, 아시아 경제위기가 일본산업의 국제네트워크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변수가 특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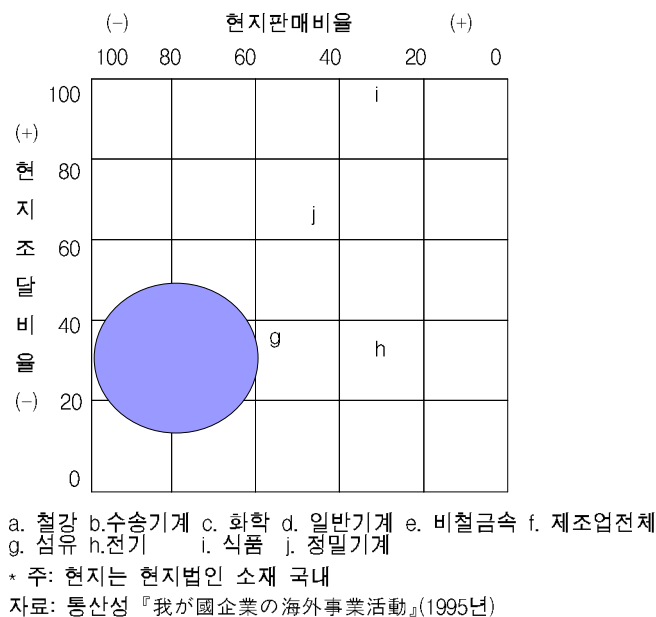
2. 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본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한편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제조업 및 금융업의 타격은 일본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으로 증폭되어 돌아오게 된다. 우선 금융업의 경우, 본국은행에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겨주게 되었고, 은행들이 자기방어적 태도를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은행들은 대출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용자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부실채권으로 인한 증권 및 은행의 몰락(야마이치증권,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 등)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용자회피로 인해 대규모의 토목업자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빈발하게 되었다(『日本經濟新

聞』朝刊, 1998.1.3; 『東京讀賣新聞』朝刊, 1998.3.1). 이제 아시아의 위기가 은행들의 네트워크를 타고 곧바로 일본경제를 ‘공격’하게 된 셈이었다.

제조업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통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경제위기는 일본의 현지 제조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영향력은 산업별 특성과 국제분업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통화위기로 인한 외환차손(外換差損)은 산업전반에 걸친 부정적 요인이었다. 한편 통화위기가 야기한 수출가격 인하와 현지조달가격의 저하는 일부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현지수요의 저조와 수입가격의 상승이 상당수 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진출기업은 대상시장의 성격 및 현지조달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다(山根俊彦・吉川康之, 1998: 23). 그림 5.는 ASEAN 국가들에서의 산업별 영향력의 정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5. ASEAN4의 업종별 현지판매 비율과 현지조달비율(제조업, 1995년)



여기에서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현지조달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현지판매 비율이 높을수록 피해의 정도는 크게 나타나며, 그 역의 경우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에 따라 추산컨대, 현지진출 일계산업 전반의 피해정도(f)가 심각한 것과 더불어, 특히 철강산업(a), 자동차산업(b), 화학산업(c), 일반기계산업(d), 비철금속산업(e)의 산업의 타격이 심했으며, 정밀기계(j)와 전기산업(h)은 비교적 피해가 작은 편에 속했다. 그리고 피해의 내용을 보건대, 외환차손, 현지차

입부담증가, 부품·원료비용의 증가, 자금순환의 난관, 판매의 저조 등으로 요약된다(山根俊彦·吉川康之: 26). 여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외환차손의 경우 안정적 국제통화제도의 형성이, 현지차입이나 자금순환난관에 대해서는 현지에 대한 유동성의 공급이, 부품·원료비용 및 판매시장저조의 문제는 일본시장과 현지시장을 연계하는 자유무역체제의 형성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는 통화제도면에서 '엔의 국제화,' 유동성 공급면에서 '신미야자와 구상,' 국제시장제도면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정책적 문제의식으로 귀착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선택지는 일부의 산업들이 불안정한 부수익 효과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주도산업전반이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해가 컸던 철강, 자동차, 화학산업 등이 보다 적극적인 주도세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위기를 배경으로 한 산업의 '아시아경제통합'의 요구는 일본 주력산업을 대변하는 최대의 재계단체 경단련의 움직임에서 잘 확인된다. 가령 경단련은 1998년 4월부터 '엔의 국제화' 정책을 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KC, 1998.4.9) 1999년 초부터 '자유무역협정'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다(KC, 1999.1.28). 이러한 내적 움직임은 2000년 들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조직화되었으며, 정부에 공식적인 정책요구를 하게 된다. 요컨대, 경단련은 2000년 3월 「아시아경제 재구축을 위한 제언」과 「엔의 국제화를 위하여: 무역결체통화로서 엔의 국제화에 대해」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라는 정책제언을 행한 바 있다(경단련, 2000a; 경단련, 2000b; 경단련제, 2000).

3. 수직네트워크형 국제분업과 비용해적 '신중상주의 지역질서'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추진자들은 나름대로 관료적 '경제민족주의' 신념 위에서 일본이 아시아로 융해되지 않는 신중상주의적 지역질서를 구축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러한 신념은 특정한 구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익 위에서 보다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Cox, 1989).

1980년대이래 진행되어 온 해외투자를 통해, 일본과 아시아는 '수직네트워크형' 국제분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요컨대 이 '수직네트워크형' 국제분업구조는 일국적 산업전략으로서 산업정책에 의해 매개된 해외투자의 결과물이다. 가령 길핀(Gilpin)이 지적했듯이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적 해외투자는 명백히 수출대체적인 효과를 갖는 투자였다(Gilpin, 1975: Chapt 7-8). 그러나 1980년대부터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 일본의 대아시아 해외투자는 대외적 산업재편을 촉진하면서도 고도화된 국내투자에 대해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국가적 수출대체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산업정책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를 전략적으로 조절해낸 셈이다. 이리하여 국내수출과 해외투자는 균형을 이룰 수 있었으며, 고도화된 국내산업과 표준제품생산의 해외투자산업이 일종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송주명, 1997: 180-181). 한편 이 수직적 네트워크는 현지와 일본간의 구조적 비대칭적 무역연계를 형성한다. 즉 네트워크의 정점인 일본에서는 국내시장을 조직화한 산업구조고도화와 수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현지국가의 경우에는 대일 수출보다는 거의 제3국 수출에 의존하면서도 지속적인 자본재·부품의 대일 수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본기업의 사적이익과 국가의 공적이익은 평행하게 동시 달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직네트워크’관계를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철저히 긍정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아시아와의 융해보다는 아시아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아시아를 일본산업의 광범위한 시장이나 배후지로서 개척하는 신중상주의적 지향을 공고화하게 된다.

VII. 맺음말: 요약과 전망

우리는 지금까지 1990년에 본격적으로 대두한 ‘새로운 아시아주의’에 대한 개념화의 문제부터 그 현실태, 그리고 주요쟁점, 나아가서는 그것의 물질적·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앞선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전후 미국과 일본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상대화하면서, 아시아 지역통합을 향후 일본의 핵심적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하는 경제외교사조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이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① 경제대국화론의 연장으로서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 내셔널리즘’이며, ② 현실적 사조로서 ‘견미입아’론과 ‘이미입아’론을 들 수 있으나, 이중에서 특히 미·일 관계를 폄하하고 아시아를 중시하는 ‘이미입아’론이 보다 완전한 형태이고, ③ 중국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두 개의 논리적으로 대립적인 아시아인식 - 대아시아와 중아시아 - 을 보이며, ④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비유해성, 차별성을 전제로 아시아를 일본산업의 일방적 배후지로 개척하려는 신중상주의적 안행발전관에 입각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우선 ①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의 조건 속에서 ‘경제대국’적 대응방향 ② 미국정권과의 오점 및 갈등증폭 요인의 강화 ③ 아시아 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선택지 축소와 일본위상의 성장 등 세가지 국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면서 대두하였다.

넷째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그것이 발원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 - 산업적 지지와 구조의 영향력 - 을 갖고 있다. 먼저 산업적 지지면에서 ① 80년대와 90년대 일본산업의 해외투자과 융자를 통해 추진된 실질적 아시아지역통합은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일반적 경향을 야기했으며, ② 일본산업 전반을 타격한 아시

아경제위기 속에서 철강, 자동차, 화학, 기계산업 등 피해산업을 선두로 일본의 주력산업 전반이 글로벌 경제의 폐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명시적인 통합제도의 요구를 배경으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정책수준으로까지 구체화되었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까지 형성되어 온 일본과 아시아간의 산업간 수직네트워크라는 구조는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신중상주의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한편 최근 코이즈미 일본정부의 중심적 외교노선은 친미 내셔널리즘의 조류에 상당히 경사되어 있는 느낌이다. 직전시기 '아시아주의'에서 있던 역사의 진자가 이제는 정반대인 '친미내셔널리즘'으로 향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국제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기반이라는 물질적 기반 위에서 전개되어 왔다. 물론 국제적 조건의 일부는 변경 - 미국과의 국제적 오점요인의 일시적 제거, 아시아 위기의 침정화 -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전개 속에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기반에 있어서도 최근 일본산업의 아시아중시경향은 더욱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표면의 '친미 내셔널리즘'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동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이니셔티브로 확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 송주명. 1997. 「외압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서 해외투자정책: 1980년대 일본의 '확장적' 신중상주의적 산업재편전략」. 『국제정치논총』 제36집 제3호. pp. 153-182.
- _____. 1998. 「일본의 APEC 정책 1998-1996: 신중상주의적 지역주도」. 『경제와 사회』 제39호(가을). pp. 37-75.
- _____. 2001. 「일본경제외교에서 아시아의 부활: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성격」. 장달중 편. 『글로벌리제이션과 일본의 구조전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근간).
- 이명우·송주명. 2001. 『코이즈미 일본의 향방: 참의원 선거결과와 8·15 정국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2001-5(통권36호, 9월).
- KC. 『Keidanren Clip』. 각호.
- 岡崎久彦. 1999. 「アジアにも半世紀の平和を: 21世紀を向けての日本の国家戦略」. 『中央公論』(7월). pp. 44-57.
- 関静雄編著. 1999. 『近代日本外交思想史入門: 原典で学ぶ17人の思想』.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 広松渉. 1989. 『「近代の超克」論: 昭和思想史への一視覚』. 東京: 講談社.
- 經濟団体連合会(경단련). 2000(a). 『アジア經濟再構築のための提言』(3월13일).

- _____. 2000(b). 『自由貿易協定の積極的な推進を望む: 通商政策の新たな展開に向けて』(7月18日).
- 経団連金融制度委員会(경단련제). 2000. 『円の国際化に向けて: 貿易決済通貨としての円の国際化について』(3月2日).
- 大蔵省, 『金融財政統計月報』, 각년.
- 木坂順一郎. 1992. 「大東亜共栄圏」. 外務省外交史料館日本外交史辞典編纂委員会編. 『日本外交史辞典』. 東京: 山川出版社. pp. 503-504.
- 白石隆. 2000. 「アジアをどう考えるか」. 『中央公論』(4月). pp. 58-71.
- 山根俊彦・吉川康之. 1998. 「アジア経済危機と日本企業」. 『第一勧銀総研レビュー』4号. pp. 1-62.
- 石原慎太郎. 1988. 「新アジア攘夷論」. 『文芸春秋』(8月). pp. 110-125.
- 船橋洋一. 1998. 「中国とのつきあいかたを誤るな」. 『中央公論』(7月). pp. 34-45.
- 松本健一. 2000. 「アジア主義は終焉したか: 竹内好『日本のアジア主義』精読」. 松本健一編著. 『竹内好『日本のアジア主義』精読』. 東京: 岩波書店. pp. 90-190.
- 若宮啓文. 1995. 『戦後日本のアジア観』. 東京: 朝日新書.
- 栄沢幸二. 1995. 『‘大東亜共栄圏’の思想』. 東京: 講談社.
- 田久保忠衛. 2001. 『新しい日米同盟: 親米ナショナリズムへの戦略』. 東京: PHP新書.
- 田中明彦. 2000. 「新しい東アジアの形成: 日本外交が目指すもの」. 『中央公論』(6月). pp. 66-83.
- 田中平蔵. 1999. 「勝負は10年. 日米は再逆転する」. 『文芸春秋』(6月). pp. 109-118.
- 佐藤誠三郎. 1997. 「新・一党優位制」. 『中央公論』(4月).
- 竹内好. 2000. 「日本のアジア主義」. 松本健一編著. 『竹内好『日本のアジア主義』精読』. 東京: 岩波書店. pp. 2-88.
- 中西輝政. 1999. 「世界の敵‘中華帝国’は必ず滅びる」. 『文芸春秋』(6月). pp. 99-108.
- _____. 2000(a). 「‘第2の戦後’の国家目標」. 『中央公論』(2月). pp. 50-65.
- _____. 2000(b). 「今, 再生を阻むのは何か: 日本の敵」. 『文芸春秋』(3月). pp. 94-103.
- 重村智計. 1999. 『日米文明の衝突: 病人同士の憎み合う』. 東京: 光文社.
- 池田維. 1994. 「‘アジア主義’ではないアジア外交を」. 『外交フォーラム』(2月). pp. 90-96.
- 沖本, D. I. ・ステイブン・D・クラスナ. 1987. 「日本の通商姿勢の変容」. 細谷千博・有賀貞編. 『国際関係の変容と日米関係』.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pp. 215-248.
- 品川正治. 2000. 「平和憲法にふさわしい日本経済システムを」. 『経済』(7月). pp. 42-55.
- 海津政信・西沢隆. 1997. 「自動車, 機械, 素材を直撃: 支えるはずの日本が苦しい」. 『エコノミスト』(12月16日). pp. 80-83.
- Cox, Robert W. 1989. "Production, States and Change in World Order." in Ernst-Otto Czempiel and James N. Rosenau. eds. *Global Changes and Theoretical Challenges: Approaches to World Politics for the 1990s*. Lexington: Lexington Books.
- Cronin, Richard P. 1992. *Japan, the United States, and Prospects for the*

- Asia-Pacific Century: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Gilpin, Robert.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D. 1978. "United States Commercial and Monetary Policy." in Peter J. Katzenstein. ed. *Between Power and Plenty: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New Asianism' in Japan: Its Socio-economic Basis and Characteristics

Song Joo-myung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hin University

This paper analyses the socio-economic basis of Japanese 'New Asianism (NA)' caused after the 1990s. To sum up,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below.

First, NA is defined as the trend of diplomatic ideas that lowers the significance of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U.S. and Japan in the post-war era, and regards Asian region as a focal strategic option of Japan.

Second, NA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① it stems from the ideas of 'economic nationalism,' intending to maintain Japan in the position of global economic power and to maximize her own national interests throug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② its actual, nearly complete representation is the type of so called 'ribeinyua(離米入亞)', which means 'gradually separating Japan from U.S. influence and, putting Japan in Asia,' ③ it includes two logically rival understandings on the scope of 'Asian region' based on different attitudes to China, and ④ it is grounded on a Neo-Mercantilist ideas, the so called 'flying geese model' that places Japan in structurally salient position apart from Asia in the hierarchy of Asian division of labor, and includes intention to change Asian region to an exclusive market or overseas production base of Japanese industries.

Third, NA is established by the following three international conditions: ①

Japan's strategic response to rapid neoliberal globalization, ② the mismatch and the strengthening conflict in the level of governments' or ruling parties' orientation between U.S. and Japan ③ the restricted political options of Asian countries and their growing reliance on Japan's proactive supportive role during Asian economic crisis.

Finally, NA has its own socio-economic basis, the support of Japanese industries and the structural effect of international networks of Japanese industries. In the point of industries' support, ① the actual integration of Asian region by a huge sum of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nd immense financing of Japanese private banks in 1980s and 1990s gave rise to the general trends of NA in Japanese domestic politics, ② NA evolves to the concrete polici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Yen' and 'Free Trade Agreements', by distinct demands on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from the overall leading industries, followed by the 'more harmed industries', i.e., steel, automobile, chemistry, and machinery for minimizing the risk of global economy in the situation of Asian economic crisis. Furthermore, the structure of intra vertical networks of Japanese industries between Japan and Asian region, formed in the mid 1990s, influence NA to strengthen its Neo-Mercantilist nature.

송주명. 한신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Tel: (031)3706-731(O). E-mail: jmsong@hanshin.ac.kr